

차 례

프로그램 소개	3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이해	7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회의 역할	29
김영도(충남사회적기업협회 회장)	
사례발표-사회적기업 ‘서천군귀농인협의회’	37
정경환(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9
이병도(서천군귀농인협의회 회장)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	53
조동준(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61
이재국(얼굴있는먹거리 사무국장)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	65
최선희((사) 씨즈 충남지부장)	

프로그램

13:30 접 수
~14:00

14:00 개회 및 인사말
~14:10

14:10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15:00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회의 역할
김영도(충남사회적기업협회의 회장)

사례발표 - 사회적기업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정경환(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

15:00 휴식
~15:10

15:10 종합토론
~15:50 토론자 1 - 이병도(서천군귀농인협의회장 회장)
 토론자 2 - 조동준(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토론자 3 - 이재국(얼굴있는 먹거리 영농조합 사무국장)
 토론자 4 - 최선희(Seed's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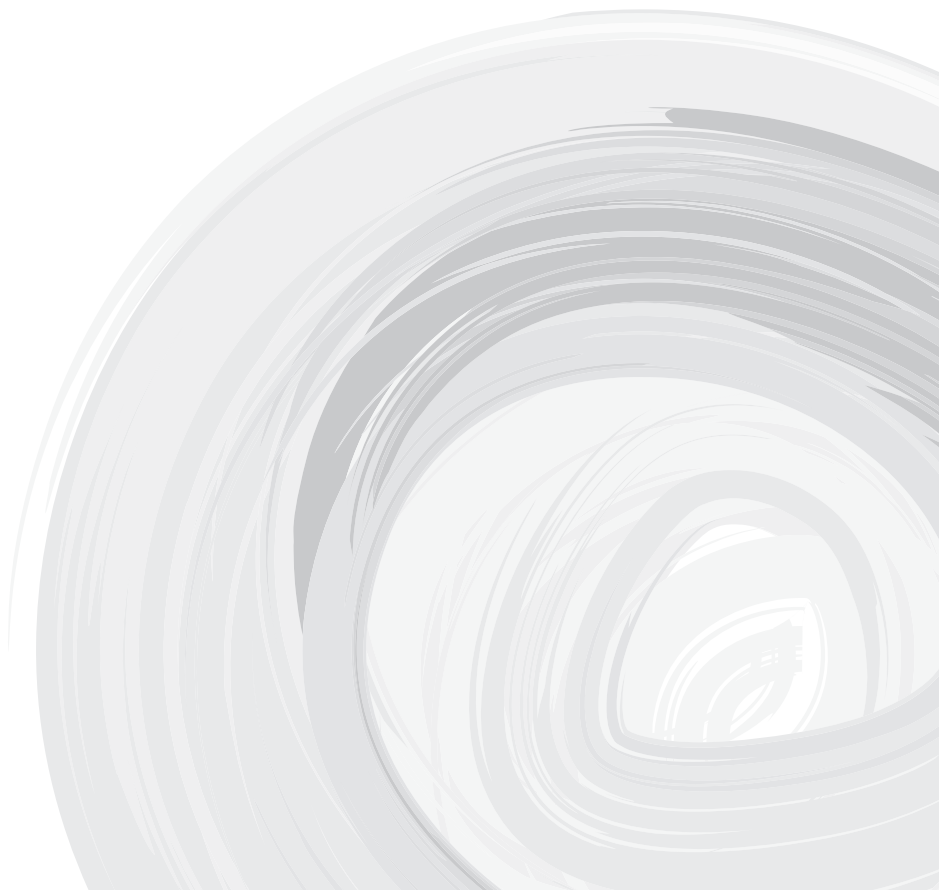
15:50 질의응답 및 토론
~16:15

16:15 폐회
~16:20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

송두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2011.10.28(금)

사회적경제의 이해



충남발전재단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적경제가 뭐여?
(Social Economy)

사회주의 경제?
(socialist economy)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경제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

커뮤니티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사회적 경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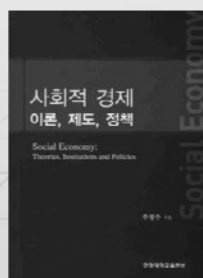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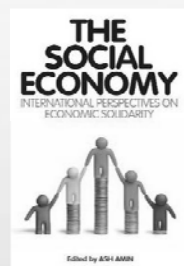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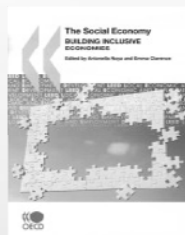
• 사회적(社會的)의 의미

-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또는 그런 것(사전적)
-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한다.

• 사회적경제의 정의

- it is not part of the Private(For-Profit) Sector
and is not part of the Public(Government) Sector
- ❖ The Voluntary Sector
- ❖ The Non-Profit or Not-for-Profit Sector
- ❖ The Third Sector
- ❖ The Co-operative Sector
- ❖ Community Business Sector

사회적 경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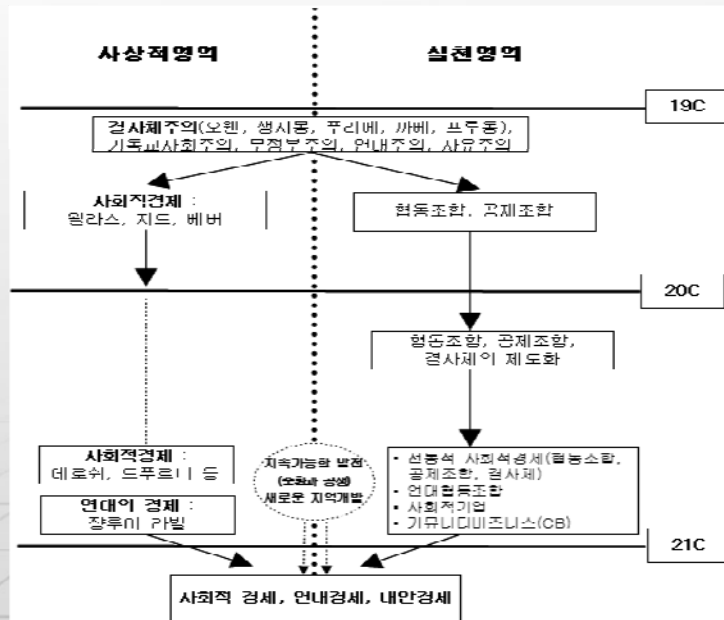
왜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 하는가?

-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협소성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목적 추구를 강조
 -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인증조직에 한정하여 사용
 - 사회적배제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 수단의 하나
-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는 이유
 - 일체의 경제활동 영역(생산, 소비, 교환, 분배)에 관여
 - [협의]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는 제3섹터, 비영리영역
 - [광의]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색
 -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의 필요성(관행적 지역발전 모델의 한계)
 - 내발적 발전 필요성 대두 등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
 -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문제점,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 결사체주의, 연대주의
 - [사상적 영역] 사회적경제, 연대의 경제
 - [실천영역] 협동조합(노동자, 신용, 소비자 농업), 공제조합으로 조직화
-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사
 - 산업혁명 초기인 19세기 초반부터 자발적으로 조직
 - 지배적 경제질서와 그 폐해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대응의 산물
 - ❖ 상호공제조합 : 열악한 노동환경, 취약한 생활환경에 따른 생활상의 위험증가
 - ❖ 소비자협동조합 : 기존 농촌공동체로부터 이탈에 따른 먹을 거리 조달체계 해체
 - ❖ 민간단체 : 공동체적인 빈민구제 시스템의 해체
 - ❖ 신용협동조합 : 예금은행의 부재와 고리대금업의 횡포
 - ❖ 노동자협동조합 : 실업자의 증가와 소규모 작업장 및 장인들의 몰락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가?

80년대 이후 사회적경제의 확산

- 1980년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 현장 제정
- 1981년 프랑스 총리실에 사회적경제담당 정책조정실 설치, 지원기금 설립
- 1988년 벨기에 알론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개념 정의채택(1990)
- 1989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를 다루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개념정의
- 1996년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개혁의 수단으로 인정
- 2002년 유럽연합 6개 국가가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부서 신설
-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연대적 경제에 대한 담론과 결합추세
- 국제기구(OECD와 ILO)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중요개념으로 자리잡음
- 2009년 EU의회 사회적경제 결의안 채택
- 2010년 하토야마 일본총리 '새로운 공공(국민, NPO, 기업,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
- 2012년 UN의 국제협동조합의 해 선포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Karl Polanyi의 경제

정의 실질적 경제(substantive economy) : 살림살이 경제(삶, 생명활동과 연계)

-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 : 돈벌이 경제(이윤/효용극대화)

❖ 형식적 경제는 교환의 근대적 형태로 간주

● 실질적 경제 개념 통한 주장 (거대한 전환, 1944)

- 인간사회에서 물질적 교류는 호혜성(나눔, 관대함, 친절),

재분배, 교환, 가계(자급자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제도적 통합과정

-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통합적 과정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탈하여 사회를 파괴

❖ 사회의 실체인 인간(노동)과 자연(토지), 화폐(구매력)를
상품화함으로써 사회의 토대를 파괴

❖ 사회적경제란 경제행위중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
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사회적 경제조직의 영역은 어디인가?

●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

- 단일계층(혹은 이해관계자)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조직

- 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노동자협동조합), 공제조합

●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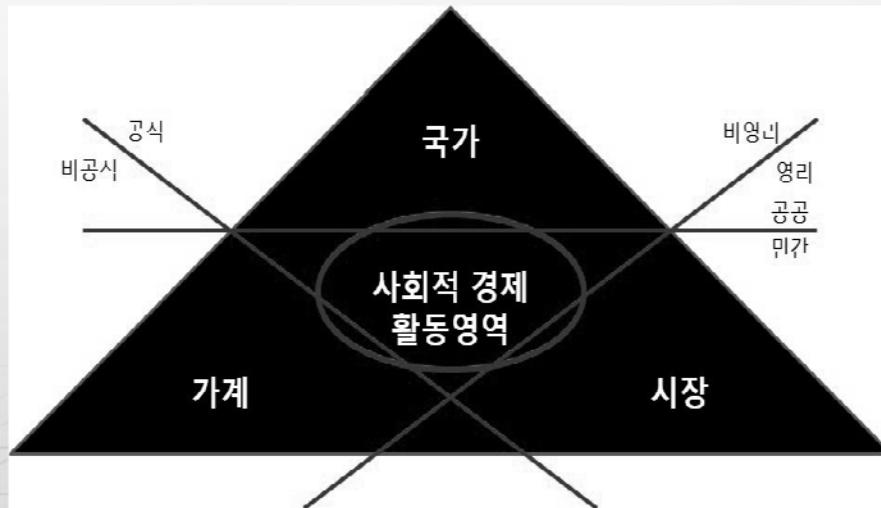
- 다중이해관계자 조직

- 1990년대 이후 구성원(조합원)에 대한 연대 추구 및 사회적기여 목적 추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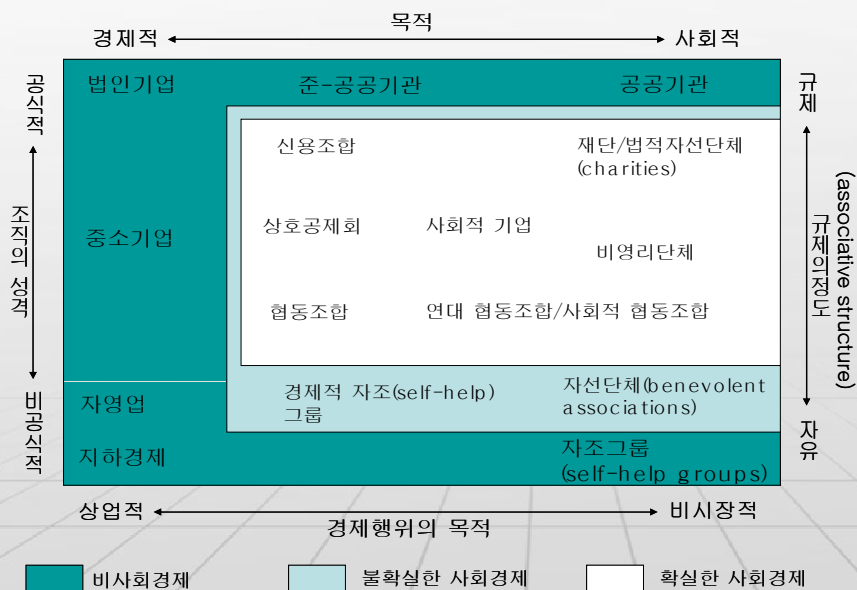
- 각국별 법적 공식조직으로 발달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연대협동조합, 비영리조직(NPO) 등

사회적 경제의 활동영역을 어디인가?



사회적 경제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설명
국가 ▼ ▼ ○ ○ ○ ○ ○ ○	정부의존 ▲ ○ ▼ ▼ ▼ ▼ 자립지향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 ○ ▲ ▲	비영리 ▲ ○ ▼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민간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마이크로 크레딧)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장 영리	영리		신협, 새마을금고

출처 : 노대명(2007)

사회적 경제조직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예	
생 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 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
소 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 환	지역화폐, 아나바다운동단체 등	
분 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출처 : 신명호(2009)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

• 이탈리아 볼로냐

- 이탈리아 협동조합 수도
- 100만명의 조합원 보유, 전체 근로자의 1/10인 3만 5천명이 고용
- 지역내 상위 50대 기업에 15개가 협동조합
- 5천 300여개 협동조합이 4조 8,000억 매출
- 1인당 생산액 4,200만원, 실업률 3.1%
- Legacoop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1956년 아리스멘디 신부가 설립한 협동조합
- 총255개의 사업체로 구성(111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자회사)
- 교육, 사회보장, 금융과 재정, 연구개발 등에 8만 5천명 종사(2009년)
- 교육 : 몬드라곤대학등 총8개 교육기관
- 사회보장 : 라군아로(1967년 설립)가 보험제공
- 금융과 재정 : 노동인민금고(1959년 설립)
- 연구개발 : 응용기술연구 협동조합 이켈란(1974년 설립)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조합

- 사회적경제조합법 제정(1991년) : 지역사회 전체 이익, 시민들의 사회적통합을 위해 활동, 노동자, 소비자, 지자체를 포함하는 법인, 자원봉사자로 구성
- A유형 : 사회적서비스(사회, 보건, 교육, 거주시설, 여가 등) 제공
- B유형 : 사회적 불이익자를 노동시장에 공급(노동통합활동에 종사)

• 퀘벡 연대협동조합

- 연대협동조합 설립(1997) : 지역발전, 시골마을 소멸, 근린서비스 폐업, 탁아서비스 발전, 노동통합, 고령자를 위한 홈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노력에서 출발
- 2007년 까지 479개 설립, 현재 300여개 활동
- 32,000개 협동조합, 39개 공제조직, 850만 조합원, 87,000개 일자리

• 그라민 은행

-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창안(1973년)
-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라민은행 법인 설립(1983)
- 1993년 이후 흑자 전환, 대출받은 극빈자 600만명의 58%가 절대빈곤 탈피
- 대출금회수율 99%, 대출받은 빈민의 97%가 여성

사회적경제의 선진사례(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조합

- 사회적경제조합법 제정(1991년) : 지역사회 전체 이익, 시민들의 사회적통합을 위해 활동, 노동자, 소비자, 지자체를 포함하는 법인, 자원봉사자로 구성
- A유형 : 사회적서비스(사회, 보건, 교육, 거주시설, 여가 등) 제공
- B유형 : 사회적 불이익자를 노동시장에 공급(노동통합활동에 종사)

• 퀘벡 연대협동조합

- 연대협동조합 설립(1997) : 지역발전, 시골마을 소멸, 근린서비스 폐업, 탁아서비스 발전, 노동통합, 고령자를 위한 홈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노력에서 출발
- 2007년 까지 479개 설립, 현재 300여개 활동
- 32,000개 협동조합, 39개 공제조직, 850만 조합원, 87,000개 일자리

• 그라민 은행

-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창안(1973년)
-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라민은행 법인 설립(1983)
- 1993년 이후 흑자 전환, 대출받은 극빈자 600만명의 58%가 절대빈곤 탈피
- 대출금회수율 99%, 대출받은 빈민의 97%가 여성

유럽연합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 유럽연합 25개국(2007년)

(고용인원 기준)

비 중	국 가
10%이상	아일랜드, 네덜란드
5-10%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5%이하	그리스,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베니아

주)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고용인원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출처 : CIRIEC,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EESC, 2007

새로운 사회적경제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영국
 - 영국내 고용의 대략 7.3%를 사회적경제가 설명(European study)
 - 사회적경제가 Bristol 고용의 4.6%, GDP의 4.3%설명, 1,000개의 조직
- 이탈리아
 - 2009년 광의의 사회적기업 2만개에서 30만명의 일자리 추정(Iris network)
 - 협동조합부문 100만명, 민간단체부문 50만명 일자리 제공
- 미국
 - 160만개의 비영리조직, 1천 60만명 유급노동자 고용
 - 비영리조직이 미국전체 경제에 공헌하는 비율은 6.7%
- 일본
 - 생활협동조합 소속단체수 600개, 회원수 17,317명, 사업총액 136억엔
 - 노동자협동조합 취업자수 10,884명, 사업총액 228억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도입배경은?

- 사회적경제의 역사
 - 1980-90년대 : 도시빈민운동, 지역자활센터 시범운영
 - 1997년 외환위기
 - : 경제적 위기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한계에 직면
 - : 실업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 등장
 - :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 비영리조직 참여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지체 및 논의 계기
 - 중앙집권, 정부주도의 분위기로 시민사회영역의 미발달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
 -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공급 확대 및 시민사회 역할 증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실속 없는 성장

- 급격한 성장 이면의 고용 없는 성장 심화
-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의 지역내 취업을 18.5%, 65.9%가 수도권으로 취업
- 1인당 민간소비지출율은 전국 11위 수준으로 낮음
- 재정자립도는 전국 10위 수준
- 취약계층 비중은 53.5%로 전국최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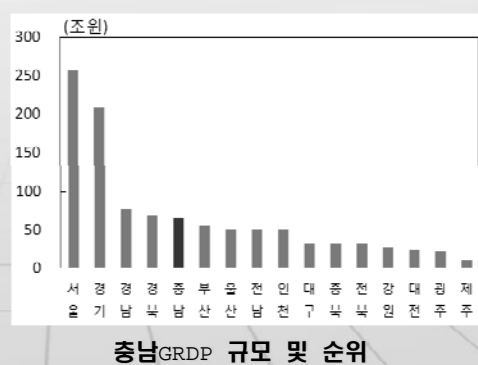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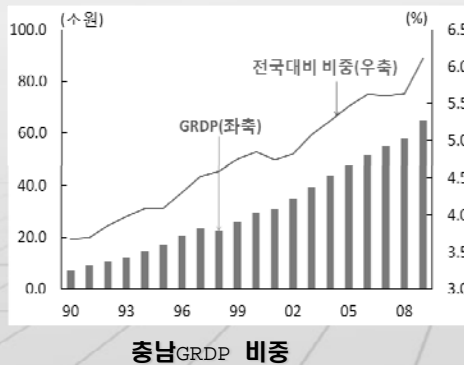
● 수도권 대자본 의존경제

- 수도권 인접 북부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 충남 전체생산액의 43.7%가 지역외 유출(50%는 수도권으로 유출)
- GRDP대비 수출비중은 전국 3위로 높음
- 특정대기업 의존도 과다하게 높음(삼성전자 고용비중 14%)
- 아산시 시세 1,304억 8천만원(2011년)중 삼성이 64.2%차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단기간내 급격한 경제총량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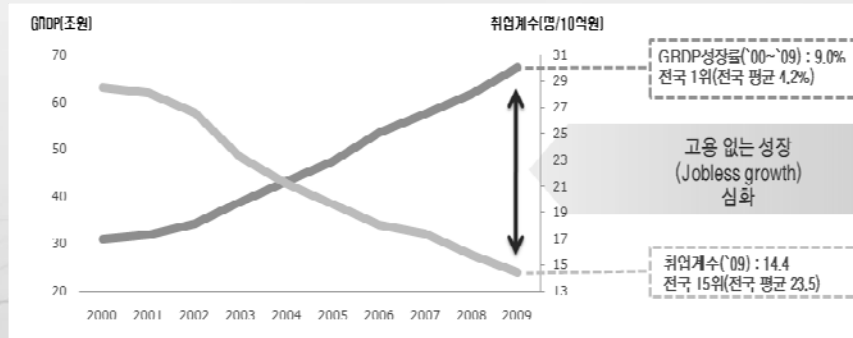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GRDP, 2009년)은 65.1조로 전국의 6.1%
- 90년의 3.7%에 비해 2.4% 상승
- 전국의 5번째로 높은 수준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 2000-09년 연평균 9.0%의 경제성장으로 전국1위
- 동기간중 취업계수는 14.4로 감소 전국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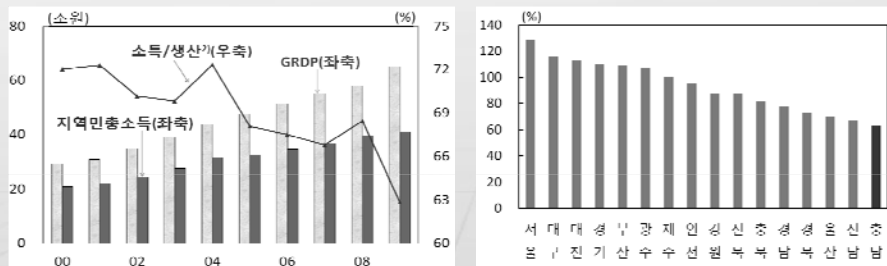


지역경제성장을 및 고용창출력 추이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생산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지역민총소득)**

- 2009년 충남지역총생산(GRDP)은 12.4% 증가
- 동기간중 총소득은 3.2% 증가에 불과
- 생산대비 총소득 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2009년)



충남지역 GRDP 및 지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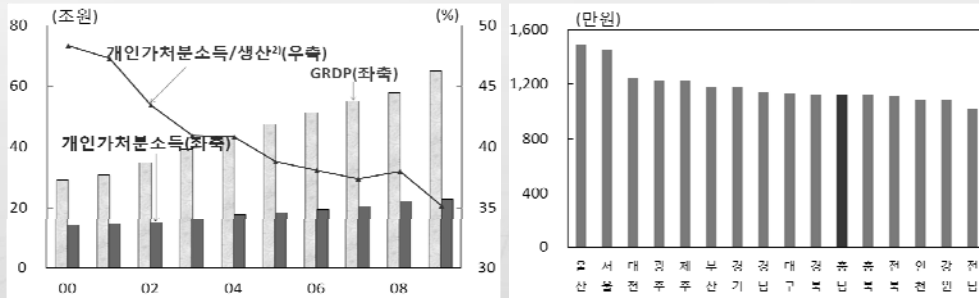
시도별 생산대비 지역민총소득 비율

- ❖ 총생산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계상
❖ 총소득 : 기업본사, 근로자주민등록지 기준 계상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생산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개인가처분소득)

- 2009년 1인당 1,124만원으로 1인당 GRDP의 33.7%에 불과
- 전국 16개 시도중 11번째



충남지역 GRDP 및 지역민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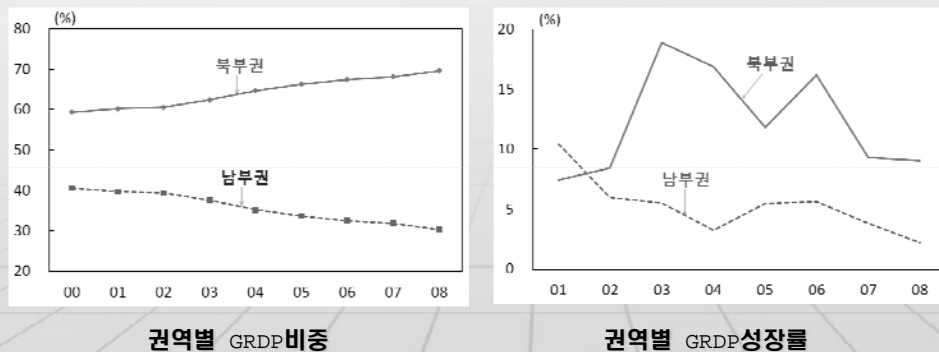
시도별 생산대비 지역민총소득 비율

❖ (개인)가처분 소득 : 개인소득 중 소비 및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 권역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GRDP비중은 2000년 59.4%, 08년 69.7%로 증가
- 2001-08년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GRDP는 연평균 12.3% 성장
- 나머지 시군은 동기간중 5.3% 성장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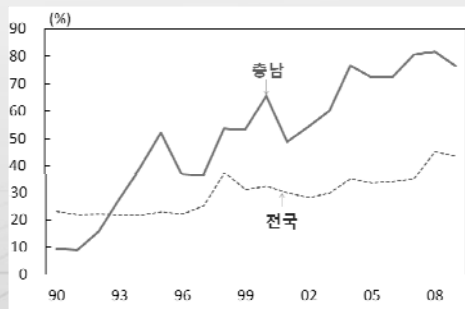
권역별 GRDP 비중

권역별 GR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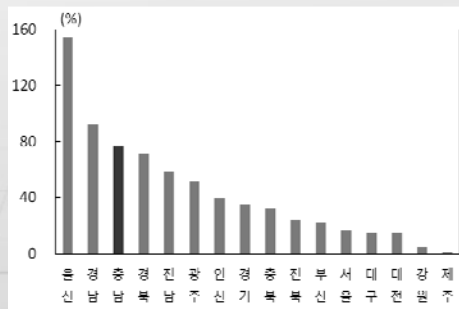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게 될 배경은?

지역경제의 수출 의존도 심화

- GRDP대비 수출비율 1990년 9.4%에서 2009년 76.5%로 상승
- 16개 시도중 울산(154.1%), 경남(92.3%)에 이어 3번째 높은 수준
- 순이출(순수출 포함)의 지역경제성장 기여율이 94.9%로 매우 높음



GRDP대비 수출비율 추이



시도별 GRDP대비 수출비율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느정도일까?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유형분류	세부설명	조직수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15
	② 노인생산공동체	243
	③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④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⑤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81
	⑥ 노동부 사회적기업	17
	⑦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32
	⑧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0
	⑨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2
민간지원기관	⑩ 대안금융기관	3
사회적 경제조직	⑪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359
	⑫ 노동자협동조합	
	⑬ 소비생활협동조합	17
	⑭ 농업	426
	⑮ 수협	8
	⑯ 산림조합	18
	⑰ 산업	105
	⑱ 새마을금고	62
	⑲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희망업체	116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느정도인가?

• 충남의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비즈니스 현황(2011.8)

구 분	계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 체회사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2010	2011	2010	2011	
계	114(4)	17	4	17	41	11	22(4)	2
천안시	14	4	1	3	4	1	1(1)	
공주시	8(1)	2		1	2	1	2	
보령시	2				1		1	
아산시	9	1	2	2	3		1	
서산시	7	1			4		2	
논산시	11	2		2	4		3	
계룡시	1						1	
금산군	7	2		1	3		1	
연기군	6	3		1	1		1	
부여군	7	1		1	1	2	1	1
서천군	13(1)			3	7	1	2(1)	
청양군	6			1	2		2	1
홍성군	6		1	2	1	2	0(2)	
예산군	8(2)				5	2	1	
태안군	4				1	1	2	
당진군	5	1			2	1	1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떻게?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 사회적경제조직 595개 단체 의식조사
- 조사대상조직의 82.2%가 사회적경제를 알고 있음
- 자신의 조직이 사회적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조직도 45%가 인지하고 있음

사회적경제부합여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부합함	91.5	8.5
보 통	70.6	29.4
부합하지 않음	45.0	55.0
전 체	82.2	17.8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떻게?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 충남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음

구 분	인지비중(%)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50.4
마을기업(행정안전부)	42.7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38.4
노동자협동조합	35.2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34.5
대안금융기관(마이크로크레딧)	3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6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20.7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어떻게?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가능성

- 정부와 민간지원을 받은 조직중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부분이 조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자립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구 분	매우 어려워짐	어려워짐	큰문제 없음	전혀문제없 음
장애인보호작업장	9.1	90.9		
노인생산공동체	16.1	80.6	3.2	
자활공동체	15.8	7.3	7.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7.0	78.7	4.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준비단체	17.8	75.6	6.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시민단체	20.0	76.0	4.0	
금융관련조직(대안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14.9	74.4	10.7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은?

• 자치단체 차원

-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운영
 - : 사회적경제정책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기능 등
 - : 전문가, 공무원, 연구원, 도의원, 실천가 등으로 구성
 - : 지사보고, 도 정책으로 도입을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신청
- 충남사회적경제 T/F팀 설치운영
 - :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내에 T/F팀 설치
 - :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 지방의회 차원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
 - : 도의원, 전문가, 사회적기업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 활동
 - : 집행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지원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현황은?

• 중간지원기관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 2011년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운영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 충남사회적경제 연구회 운영(11회 연속워크숍 운영)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실태분석, 활성화 과제 전략 모색
 -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

• 사회적경제 실천가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2012년 예산안)

구 분	사업명	도비(백만원)	비 고
계		1,569	
신규(예산)	사회적경제5개년계획 수립	50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50	
	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	50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계획수립후 추진
	사회적경제전략기획사업 (시군단위)	150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30	
	사회적경제 내부거래생태계 조성	50	
신규(비예산)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추진	-	
	사회적경제 육성조례 제정	-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	
기존사업	사회적경제정책 지원역량강화	50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	570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569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문제점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부족
 - 사회적경제조직 취약, 경험부족
- 충남도의 지역경제가 지나치게 외부의존적
 - 수도권으로 부터 의존한 기업에 의존, 수도권 의존도 갈수록 심화
-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 갖추기전 영리기업과 경쟁 강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및 실적주의 평가, 영리기업과 차별되지 않는 경영방식
 - 필요자금 지원을 위한 대안금융기관 접근기회 제한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시책의 협력 및 연계체계 미흡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등 담당부서 상이
- 기초 및 커뮤니티 단위 중간지원조직 부재
 -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실천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인식 부족
- 사회적경제 조직 지정건수 달성목표에 대한 부담 상존
 - 사회적기업 양적달성 목표가 부담, 질적향상, 주민역량 및 공동체기반 강화 소홀가능성

충남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제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자, 도민, ngo의 올바른 이해전제
 - OECD, EU에서 공식용어사용, 사회적기업과 용어 혼용,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사회적경제 실현위한 내생적 지역발전전략 구축 필요
 - 관행적 지역개발 전략이 아닌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육성 필요
 - 광역단위, 기초단위 및 커뮤니티 단위 중간지원 육성
 - 창업, 운영,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 홍보, 코디네이터, 조사연구 기능수행
-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연대 강화
 - 도, 시군-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개발조직간 거버넌스 강화
-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을 위한 노력 요구
 - 비정부 부문 스스로 노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대안금융체제 확립
 - 마이크로크레딧 및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통한 재원지원 방안 모색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역할

김영도(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

김영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1. 충청남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역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도모하며 사회적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회원단체와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건의
2. 회원단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3. 회원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4. 회원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5. 회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사업
6. 회원단체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시·군 토론회

1) 목적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과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조직 간의 연대활동과,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활동을 같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역할

이 토론회는 오래 동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온 사회적 경제 조직

들의 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으로 인정받고,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협의회

1) 목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
- 지역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 네트워크 활성화
- 지자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3) 세부실행방안

① 조직사업

i 목표

-사회적기업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대의기구로 활동

ii 내용

-회원조직화 . 제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조직화

iii 실행방안

-실천 활동을 통한 검증과 방향제시

iv 확대

-확대와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는 양과 질이 사물의 양면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조직은 확대만 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막상 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 강화만 되고 확대되지 않으면 조직은 대중으로부터 고립 된다.(충남도 양적팽창)

v 운영방안

-조직운영은 반드시 민주집중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는

다수를 따르고 하부는 상부를 따르고 지부는 중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보다 훨씬 기본적으로 더 우선하여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 하부가 상부를 따르게 하려면 원칙으로 밀어 부치지 말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하부를 따르게 해야 한다.

② 정책사업1(토론회)

i 목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파트너십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ii 내용

-충남도청, 각 지자체, 협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확대 및 공감대 형성

③ 정책사업2(워크숍)

i 목표

-소통과 상생의 틀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ii 대상

-사회적기업가 및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iii 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강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역에서의 역할정립

-토론 및 토의

④ 네트워크사업(정기회의)

i 목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 향상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여 조직관리 시스템 전문화 구축

ii 내용

-업종별 네트워크구축,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사회적경제 학습조직문화의 틀 마련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⑤ 교육사업(교육프로그램개발)

i 목표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
-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구축

ii 내용

- 관리자 능력개발 교육
- 종사자 능력개발 교육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활동가(멘토)역량강화 교육
- 업종별 맞춤 교육

iii 운영방안

-책에서 배운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어야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이 된다.

⑥ 홍보사업

i 목표

- 사회적기업의 지역홍보 및 활성화
- 정보와 홍보시스템 구축

ii 내용

- 사회적기업 탐방 프로그램
- 카페홍보
- 소식지 발간
- 내부거래 활성화
- 쇼핑몰 운영

4. 제언

일(직업)의 본질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재미있는 가?’, ‘잘 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적기업은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까?”

‘빵을 팔기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위해 빵을 판다.’ 는 슬로건처럼 영리도 추구하면서 고용도 창출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사회

적경제 중점으로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는 유럽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과 시장경제와 사회적목적을 접목한 정부주도의 미국의 사회적기업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에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법제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시민들의 경제와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제공을 당면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영리추구의 목적이 우리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어, 자기를 태우면서 사회를 밝히는 촛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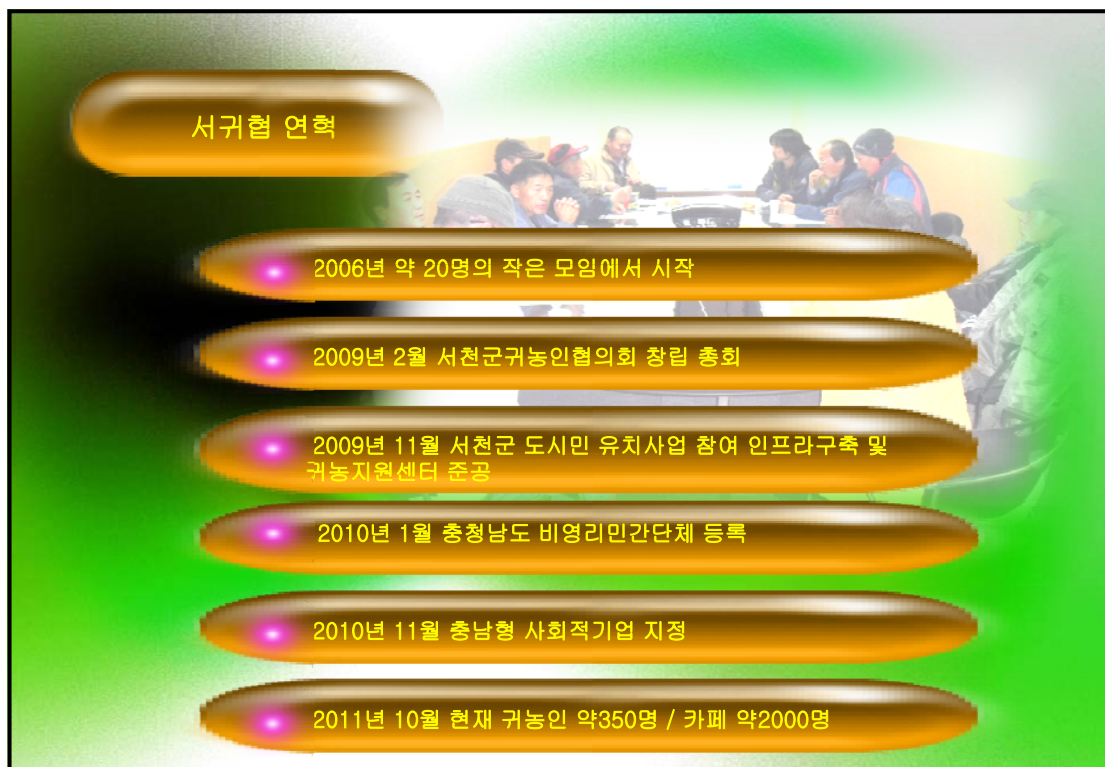
지역의 기업가, 공무원, 학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듬뿍 안길 수 있는 성공모델을 충남에서 만들어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례발표 - 사회적기업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정경환(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





조직 현황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서귀협 카페 운영

- 다음 카페 서천군귀농인협의회
- 서천 귀농인 약350명 / 도시민 약 1700명 회원
- 하루 약200~300회 방문 으로 활성화



서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 충남 서천군 문산면 지원1리 472-1
- 폐교(문산초교 성암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운영
- 관리동(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식당, 주방)
- 콘도형 숙소(2동), 체험실습지(500평), 목공예방 등



충남형 사회적기업 운영

- 사회적기업 6명 + 자체 인력 1명 등 총 7명 근무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쇼핑몰 운영
- 생태건축 및 조경 사업

서천군귀농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배경 및 필요성

세종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마을이 점점 비어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귀농귀촌 대책을 만들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귀농인들 스스로도 경제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 먹고 살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천군귀농인협의회에서는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만든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직접 팔아 영농소득을 올리려 합니다.
농촌 학습체제를 만들어 함께 즐기며 농익소득도 생계에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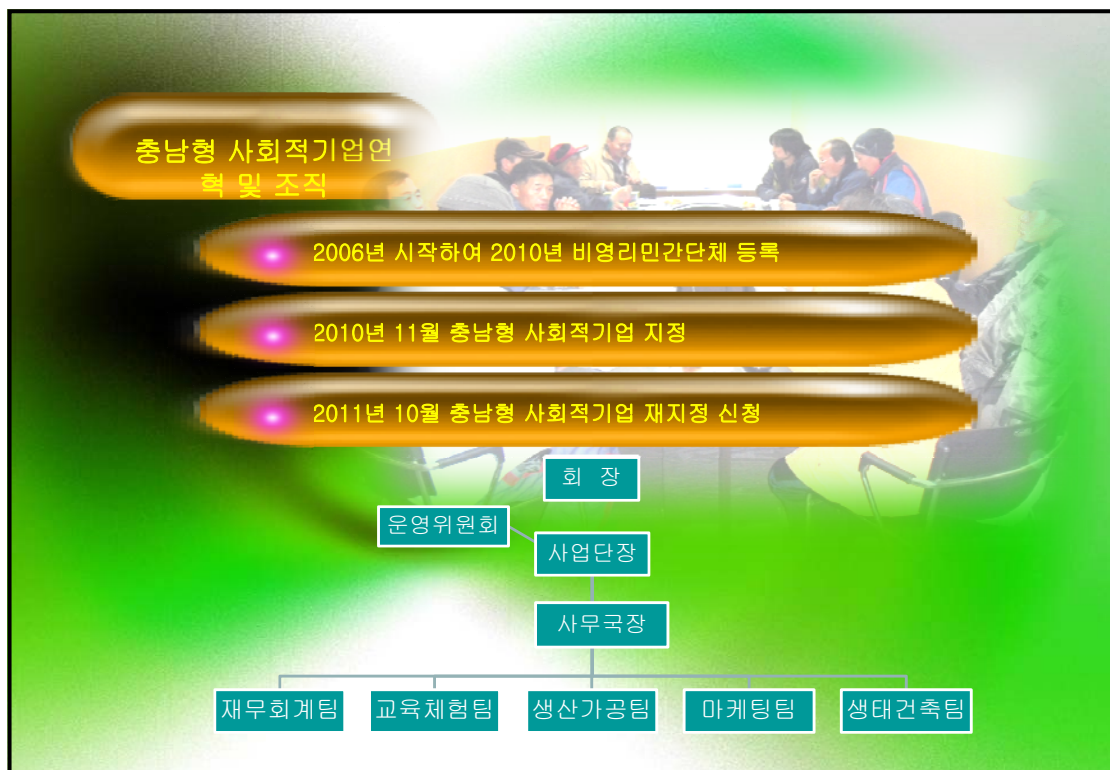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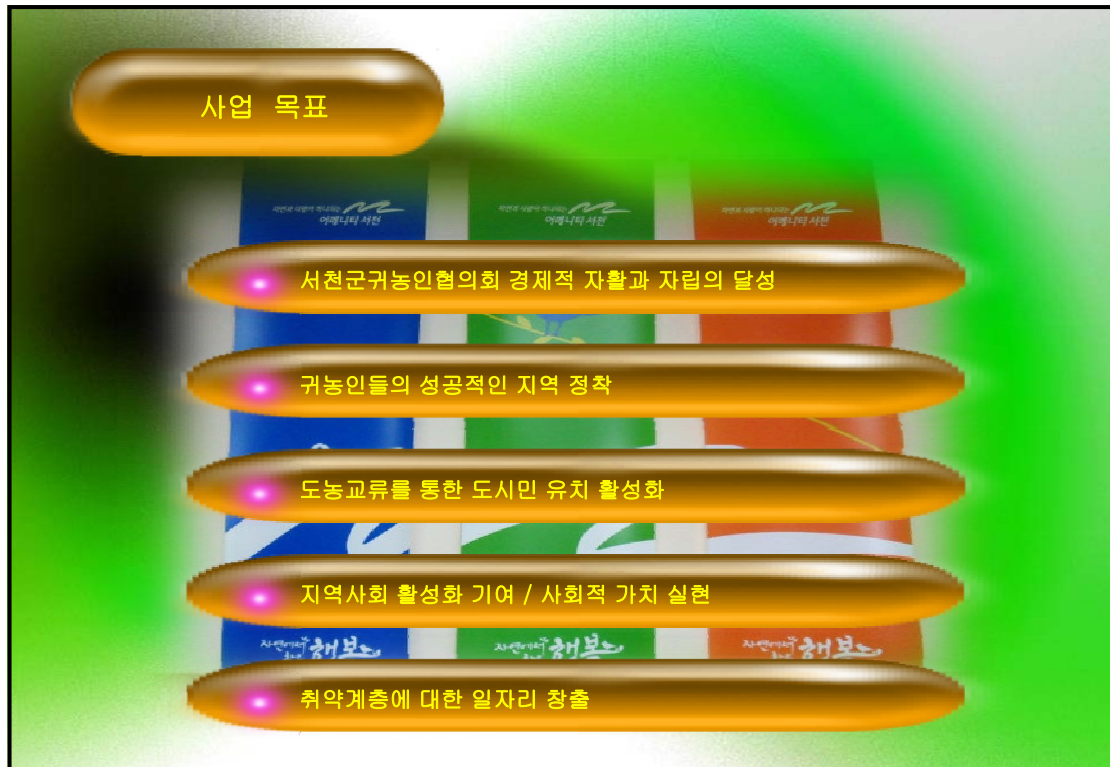
그러자니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도시민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 농사기술도 배우고 스스로 농리도 해봐야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삶,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소통과 교류
이러한 여러 과제들이 온자서는 벅차기만 합니다.
모여서 도우며 나누며 함께 해야만 하겠습니다.

서천에서
찾는 행복

scnet@hanmail.net
(041) 952-2116

Amicity
Seoscheon

서천군귀농인협의회







귀농인의 집 운영 및 농가주택 수리 봉사



지역사회 봉사 및 기여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도시민)









활동성과



0 2010~11년 년6,000명 서천군 귀농지원센터 방문
서천군 홍보 및 귀농 귀촌 상담 / 농산물 직거래, 도농교류

- 2009년 ~ 11년 총8차례 귀농투어 92가구 약200명 방문
→ 약10가구 서천 귀농/귀촌 및 지속적인 시골친구로 자리 매김
- 신규 귀농인 영농교육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연계 총10차례 약300명)
- 귀농귀촌 홍보 및 판매(귀농박람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등 수시 참여)
- 타 지자체 귀농모임에서 귀농선진지 서천군 방문(약10개 350명 방문)
- 도농교류 (목공 및 생태건축, 김장체험행사 등 운영 연인원 500명 방문)
- 충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수익사업
(약 76,600천원 / 계약포함 259,614천원)
- 지역축제 및 서천 재래장터 참여 (한산모시문화제, 서천오일장, 마서장터 등)
- 서천군민으로 지역사회 융화 및 봉사 활동(김장나눔, 사회서비스 바우처)

0 서천군민으로 지역사회 융화 및 봉사 활동(김장나눔,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시민 유치 현황

실적#		식량근로농업환경복지 도시민 유익 현황 (2011년 1월분)			식량근로농업환경복지	
구분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구분명
1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3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4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5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6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7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8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9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10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11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12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011년 1월분 실적				총	11	구분명

- 2009년 18가구 39명
- 2010년 34가구 84명
- 2011년 4분기 11가구 27명
- > 귀농지원센터 방문, 40차례 귀농투어, 목공, 생대근축체련 등을 통해
- 총 63가구 약 150명 귀농 / 귀촌

- 2009년 18가구 39명
- 2010년 34가구 84명
- 2011년 4분기 11가구 27명
- => 귀농지원센터 방문 및 8차례 귀농투어,
목공, 생태건축체험 등을 통해
- **총 63가구 약 150명 귀농 / 귀촌**

활동성과 및 긍정적 영향

- 서귀협 회원 상호간 소통 및 나눔
- 서귀협 회원 역량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 지역사회 봉사 및 행사 그리고 함께하는 나눔 및 교육을 통해 지역민과 화합 및 지역융화
- 귀농인(도시민) 유치를 통해 서천군 인구유입 증가 (2011년 기준 63가구 약150명)
-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귀농정책 및 빈집정보, 농가수리비, 영농지원 제공을 통해, 빠른 귀농 정착 유도 / 지역 거버넌스 역할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 귀농인, 지역민, 도시민 커뮤니케이션 제공
- 귀농.귀촌인의 역할 수행(농촌사회 활력, 보완 및 봉사)
- 궁극적으로 농촌공동체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제시



산과 바다, 강,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서천으로 오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병도(서천군귀농입협의회 회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1. 10. 28

이병도 (서천군귀농입협의회 회장)

1. 충남형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기관 별 역할에 대하여 :

- 충남발전연구원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역재단
- 호서대학 산학협력단
-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
- 충남사회적경제T/F팀
- =.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의 다양,

사회적기업의 도입기에는 여러기관이 참여하여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겠으나 참여기관의 다수로 인한 혼돈과 교육내용의 중복 등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수를 축소 정예화하여 기관별 교육 및 멘토링 분야를 전문화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리라 사료합니다.

또한 이론교육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판매나 생산 경영등 실무상 겪고있는 애로사항들의 해소에 도움이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시스템 개발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 =. 공동마케팅제도 운영
- =. 각 기업별 제품디렉토리 제작배포
- =. 지역 및 접근성 안배를 고려한 상설교육장운영
- =. 각기업간 Cross Selling 활성화 방안강구
- =. 공동 쇼핑몰 운영
- =.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제 운영

- =.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 =. 원자재 및 재료 공동구매제도 강구
- =. 전국대회 및 박람회 개최
- =. 업종별 Group sales and Marketing 전개
- =. 지역내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MOU 및 프로보노제 도입
- =. 지자체 및 공공기업들로부터의 공공일자리 창출 협력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는 슬로건은 기업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으나 숫자를 늘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것은 아닌지?

그 러므로서 양에 치중하다보니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되며 일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만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기업들은 기업여건의 열세속에서 생산,유통, 판매를 해결해야 하는 악조건속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각 지원기관 및 공공기관의 배려와 특성에 맞는 보호책이 일정기간동안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좁은 시장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과 제품생산의 중복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문성 및 시장의 구매력등을 분석, 소수정예 정책으로 전환함이 옳을듯 사료됩니다.

한편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혹은 이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

조동준(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

2011. 10. 28

조동준(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 들어가며 -

총론에서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더욱이 현재의 자본주의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주체(기업, 개인)를 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그 속에 속한 주민의 삶에까지 피해가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구축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할 중요한 기제이고, 외부의 거대 자본시장에 대응해 지역내에서 순환되는 경제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총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자본주의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과연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배고프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원류는 주로 서구유럽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송두범 박사의 발표자료에서 언급됐듯이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 퇴조기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우리는 이제야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자본을 점유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본의 점유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한다는 것은 ‘부의 편중’이고, 이것은 사람의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수록 시장경제의 폐해는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이 IMF 이후 경제위기에 몰려서 진행됐던 정부의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 개별적인 생산공동체 활동 등이 있겠으나 큰 줄기를 보면 복지정책으로 추진됐던 자활지원사업과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기폭제가 되어 확대되었다.

보편적 복지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응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의 활동이 여전히 ‘생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국가 복지수준이 대폭 향상되지 않거나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따지는 사회적기업 정책 아래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시장에서의 상거래가 필요치 않은 소비, 교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해도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나 몇몇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결되거나 개선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과 국가는 협조할 것인가?

일반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생산적 복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적 복지학자와 실천가들은 ‘생산적 복지’가 담고 있는 대립적 개념에 대한 ‘몰이해성’을 비판했다.

다시말해 ‘생산’은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 혹은 ‘경제’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보편성, 분배, 균등이 작용하는 ‘복지’와 결합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면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과 예산의 투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지 또한 ‘투입=결과물’로 받아들였고, 특히 IMF 경제위기를 돌파하던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서 더더욱 필요했던 논리였을 것으로 받아들인다.

진보개혁적 정부에서도 이런데 과연 시혜적 복지를 주장하고 시장친화적인 보수정부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주지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여 수용하더라도 일자리의 ‘숫자’와 ‘매출’,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치열한 생존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사회적기업을 몰아넣는 지금의 사회적기업 정책, 그 이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시장은 어떨까?

자본으로 무장한 시장과 경쟁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 ‘틈새’만을 잘 노려 볼 것인가?

이미 초기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이 끝나면서 소위 ‘문을 닫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사회적기업을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가뭄에 콩 나듯 근근히 살아남거나 대단히 크게 성장한 사회적기업도 존재한다. 이를 본보기로 나서는 수많은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시장의 영역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생존할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비극적인 현실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간에 또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이 벌어지기 일수다.

그래도 사회적경제로 가자! 연대하자!

사회적경제란, 개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 혹은 국가차원의 커다란 ‘블록’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그래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그 본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는 넘어야 할 숙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속성이 갖고 있는 블록, 즉 ‘연대’의 가치가 사회적경제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형태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연대성에 바탕한 경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관점이다. 이것은 재분배와 호혜성의 원칙이 통용되는 부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 판매를 통한 상업활동,

공공자금의 조달, 기부 및 후원금의 모집, 비화폐적 자원봉사활동 등을 모두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호혜와 연대의 원리 속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여기에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의 연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작은 지역단위에서 연대하여 블록을 형성하고, 또 다른 블록과 블록이 결합하여 더 큰 블록을 형성할 때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연대의 경제, 사회적경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런 토론의 자리는 물론이고, 서천사회적기업협의회나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또한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협소한 의미로 축소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의 틀을 벗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고 활동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군분투라는 표현처럼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하에서 지정요건에 맞추어 적절한 일자리 창출과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서귀협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수익사업, 즉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경제의 ‘생산’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쇼핑몰 운영, 생태건축 및 조경 등이다. 이 것으로 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과 약속한 일정 금액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 모두 기존 자본시장의 영역이고, 기존 시장의 상품과 경쟁해야 할 것들이다. 심지어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쇼핑몰, 생태건축 조차도 작게는 지역내 다른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체험마을 등과 경쟁해야 할 것들이다.

치열할 경쟁이 판을 치는 시장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그속의 사회적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 생각한다. 과연 이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대가 이루어질까?

따라서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은 서귀협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귀협은 예시당초 ‘귀농지원’이 가장 큰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우수사례’인 것이다. 이런 서귀협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본 업무보다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생산활동에 치중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예를 들어 서귀협은 최근까지 63가구에 150여명의 귀농을 도운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점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0여명의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이런저런 생산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가치’를 환산한다면 그 규모는 웬만큼 잘나가는 사회적기업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저소득층의 무료간병으로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언뜻 비경제활동이나 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다하겠지만 사회적가치를 경제적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장치가 연구된다면 이로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통해 비생산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이재국(얼굴있는먹거리 사무국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2011. 10. 28

이재국(얼굴있는먹거리 사무국장)

○ 토론회에 대한 생각

- 누가 준비하는 토론회인가?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인가?
- 무엇을 주제로 한 토론회인가?
-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시·군 토론회

1) 목적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과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조직 간의 연대활동과,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활동을 같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역할

이 토론회는 오래 동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으로 인정받고,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 중에서

○ 충남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1.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현황

- 광역단위 : 중간지원기관 과잉, 빈곤한 중간지원
- 기초단위 : ?

2.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략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확대 노력해야
- 시군단위 중심으로의 발전방향 설정
- 물적토대 구축해야

3. 2012년 사회적경제 사업(안)

- 관심있는 시책사업 : 전략기획사업,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내부거래 활성화

○ 사례발표 - 충남형사회적기업 ‘서천군귀농인협의회’

1.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서천군귀농인협의회’

- (예비)귀농인을 위한 넘치는(?) 활동 : 귀농인의 집, 농가주택
수리봉사, 귀농교육 등

2. 기업으로서의 ‘서천군귀농인협의회’

- 사업별 수익모델을 제시
- 조금씩 돈이 되는 사업과 왕창 돈이 되는 사업

3. 회원조직으로서의 ‘서천군귀농인협의회’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

최선희((사) 씨즈 충남지부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

2011. 10. 28

최선희 ((사) 씨즈 충남지부장)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생 조직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와 향후 새로운 조직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전제 조건이기 될 수 때문이다. 분야별 과제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개별 조직 지원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 및 철학 공유 2. 조직 운영 기본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3. 분야별 심화 교육 및 조직 진단 4. 관련 분야별 / 지역별 그룹 네트워크 강화
전체 기반 조성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2. 청년층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 예술 분야 지원확대 3.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서비스) 정부 구매 확대 4.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지역 홍보 및 일반인 교육 강화 5.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관련 행정작업 간소화 6. 민주도적인 중간지원조직의 건설 7. 관계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확보의 필요.

1. 개별 조직 지원 과제

1)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 및 철학 공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존 영리 조직들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사업의 아이템이나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위들의 구성원을 비롯, 특히 대표와 같은 핵심 리더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유하고 체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충남도 내에서 초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많은 경우,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가지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출현 경로와 가치를 지닌 조직과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이 기존 자본 중심의 영리 기업들의 운영방식과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의 존재 필요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지속해서 그 내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가치와 철학에 대해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적 회의의 훈련, 조직 내 자율적인 규율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하도록 사회적 경제 대표 및 구성원들이 반드시 관련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조직 운영 기본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각각 다른 경력과 출현 경로를 지닌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철학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회계, 세무, 노무, 인사관리 등 경제 단위로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법에 대해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체 노력만으로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전문성 부족,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활동과 관련한 기본 운영 체계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화 해서 교육, 보급해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한 그룹들의 경우, 조직 경영 능력과 관련해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 신생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분야별 심화 후속 교육 및 조직진단

앞서 언급한 두 분야에 대한 입문 과정과 초기 구축단계에 대한 지원에 이어 어느 정도 사업성과나 연혁이 축적된 경우, 계속해서 이를 발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영역별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심화교육 과정의 공급과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설계할 수 있는 조직 진단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인증 연차가 지나면서 이러한 대상 기업들이 충남도 내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설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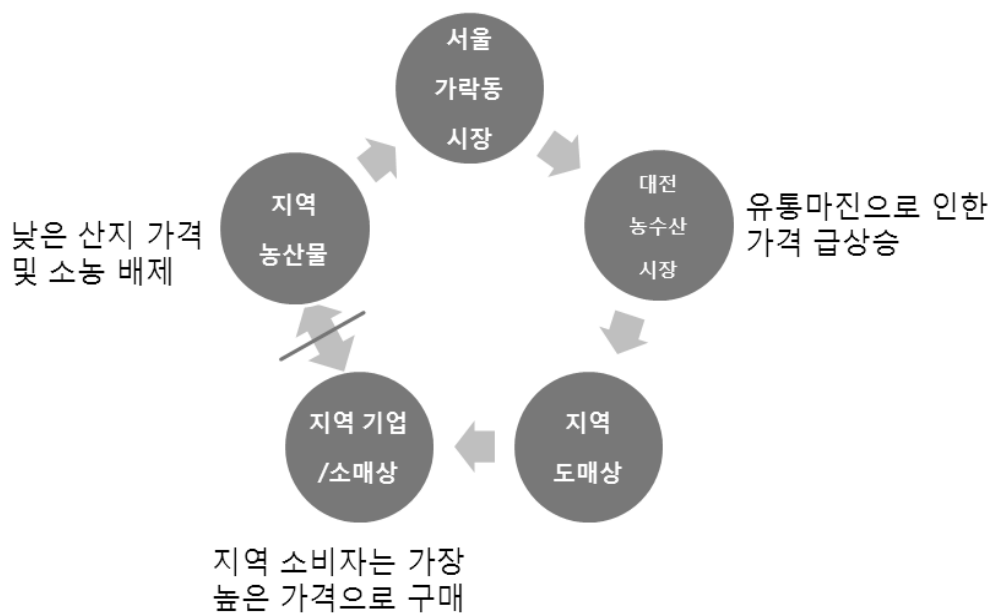
4) 관련 분야별 / 지역별 네트워크 강화

앞서의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야별, 지역별 네트워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자기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평가, 공동의 과제 설정 및 수행 방식이 사회적 경제 조직간 연대와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기술개발, 레시피 공유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유하고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상호간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내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후발 참여 주자들에 대해서도 전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 역할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시군별 사회적 경제 모임과 충남도 내 분야별 분과 모임 조직 등을 기본 단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전체 기반 조성 과제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역 농산물의 경우, 가락동 시장을 거쳐 대전 농수산물시장이나 지역 도매상을 통해 다시 지역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과정에 따른 상당한 유통마진으로 오히려 현지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온양온천시장’은 전철 연결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지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기대하고 방문했다가 이렇게 유통을 거치면서 오히려 수도권보다 높은 현지 가격에 실망하고 지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점

지역 소비자로서 지역 농산물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구매하고자 하여도 현재 유통구조는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산, 소비,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로 지역 내 생산품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전체 차원의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는 높은 유통마진에 따른 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소농 고령농에 대해서는 대량 유통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로 지역의 많은 생산자들이 소규모로 생산되는 작물에 있어서는 마땅히 환급할 수 있는 통로를 갖지 못해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학교 급식지원센터 등의 준비 작업과 관련해 최소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이라도 지역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획생산을 통해 직거래를 강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지역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거점으로는 충남도 내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또한 소농 고령농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지역이나 관광지와 연계한 농부 마켓의 활성화, 대전, 천안 등 충남권 도시 생협과 연대한 로컬푸드 할당제 등 다양한 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한 예술 공원의 경우, 수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하는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소액의 농산물 교환권을 나눠주고 지역 소농들이 직접 판매하는 작은 규모의 농부마켓을 공원 내 열어 농산물과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인기있는 관광 코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때,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층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 예술 관련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확대

청년층 실업문제와 관련,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타 업종의 경우, 고령자 취업 지원에 비중이 있다면 문화 예술 분야의 경우, 고령자보다는 청년층의 인력과 전망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 충남형 사회적 기업 중에도 청년층을 고용한 한옥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단을 비롯, 총 5개의 문화 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었다. 충남도 내 산재해 있는 과거의 전통 문화 지역 자원을 현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문화 예술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은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다. 특히 전통문화 예술의 경우 한정된 시장으로 불규칙한 공연 수입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체계적인 내용 축적과 인력 양성이 힘들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설 공연장, 연습실 제공, 학교 연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사업적 측면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실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3)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서비스) 정부 구매 확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구매 해 줄 것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원 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지자체 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식 및 홍보 부족, 생산품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 외 전 부서 차원에서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지자체 우수 사례 홍보 등 보다 구체적인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수요를 조사, 이에 대한 생산 계획을 세워 지자체와 협조함으로써 공공영역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품이 지역내에서 적절하게 소비되도록 하는 데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담당할 전담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100여개를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므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도록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지역 홍보 및 일반인 교육

아직까지도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명칭은 알아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 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인식 뿐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도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활용 방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지역 홍보와 일반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천안지역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관련 행정작업 간소화

현재와 같은 인건비 지원이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식의 하나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기업의 활용도나 주체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같은 규모의 비용 투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령자 중심 기업의 경우 지금의 인건비 지원 방식은 고령자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유연한 고용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도 지원방식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으므로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의 다변화와 사회적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각종 행정 서류 작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몸을 옷에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탈법과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작업의 간소화도 현장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하는 곳에서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중복, 반복, 복잡하지 않고 변화된 내용만을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편의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5) 민주도의 중간지원조직건설의 중요성

현재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지닌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고 사회적경제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간 펼쳐온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사회적경제연구회 운

영 및 진행,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생태계현황 및 조성을 위한 조사사업, 홍보책자발간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진행시켜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지원을 통한 관주도의 활동으로 진행시켜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민주도로 진행되면서 그 시너지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남도 곳곳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적구성들을 발굴하고 독려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많은 활동을 아웃소싱형태로 진행시키면서 지속성의 단절의 문제와 충남도내의 전문가 육성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은 중복되는 교육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시로 상담과 교육이루어지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주도의 지원조직들이 활성화되어 그 열정이 바탕이 될때 사회적 경제로서의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6) 관계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모든 정책들이 그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 군, 읍, 면의 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반의 교육, 정책 지침의 이해, 선진지 견학 등 해당부서만이 아닌 해당 부서를 비롯하여 시군구 전체 공무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EMO

MEMO

MEMO

MEMO